

경제위기(신용경색)시 보증의 역할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2017720202 이강일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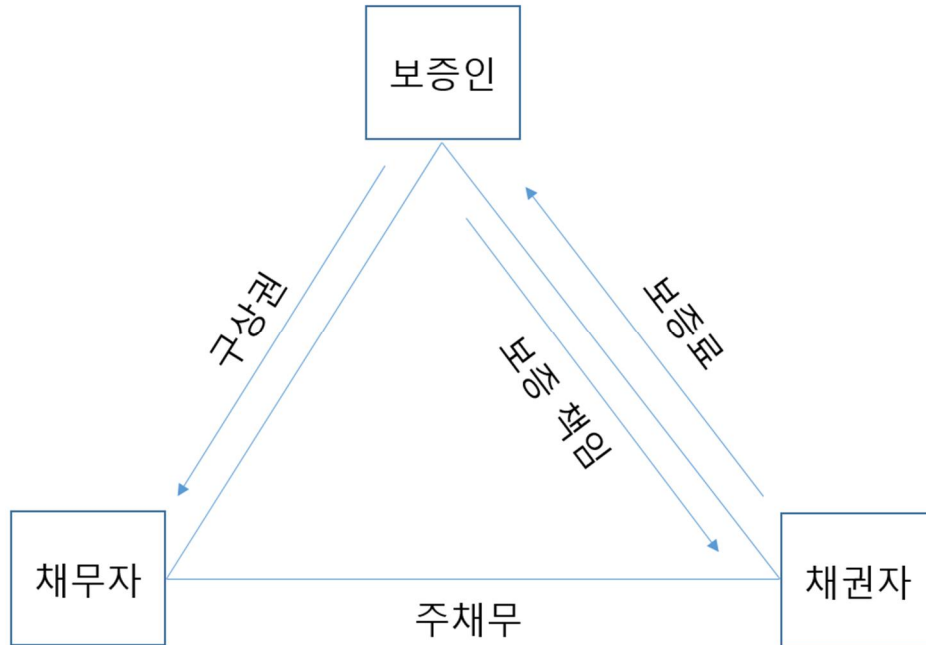
한국은 과거 두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그 중 한번이 IMF이고 다른 한번이 글로벌금융위기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IMF 외환위기시 한국의 기업 중 부도난 업체가 1997년에 17,168개, 1998년에 22,828개에 이르고 이는 94년부터 96년까지의 평균 약 12,278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세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실직자수가 165만명(1998년 7월)에 이르러 IMF 전 47만명(1997년 7월)에 비해 118만명이 1년만에 늘어났다. 원인은 당연히 IMF 외환위기이다. 경제위기시 거래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의심은 증폭될 것이고, 협력업체가 동반/연쇄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보는 기업은 당연히 어음 거래와 같은 불확실한 거래를 회피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급격한 거래 축소가 발생 할 것이고 줄어든 거래량만큼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근로자 또한 감소 시킬 것이고 이는 가계소득의 감소를 이어질 것이다.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 축소는 경제불황으로 연결되게 된다. 경제위기(신용경색)시 다시 경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신뢰를 보장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증이 될 수 있다. 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어음 발행기업)의 신뢰를 강화 시켜 줌으로써 채권자(어음 수취기업)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강화된 신뢰관계 속에서 경제활동은 차츰 개선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경제위기(신용경색)시 정부가 보증을 어떻게 사용할 것 인지와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자 한다.

II. 주요개념 및 원리

1. 보증의 개념 및 원리

보증책임은 주채무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며, 인적 담보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민법상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채권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보증책임은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계약(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되, 주채무가 무효·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보증책임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변제하는 종된 채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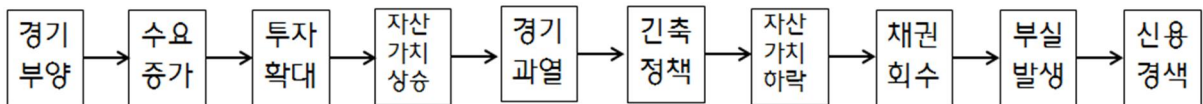
2. 경제위기(신용경색)

위기(crisis)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이다. 위기는 '결정 혹은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한자에서 위기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한자로 '危機'는 '위험과 기회'의 뜻으로,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이지만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위험이자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위기는 영역(내용)과 원천에 따라 정치위기, 경제위기, 군사위기, 사회위기, 과학기술위기, 환경위기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위기는 실존에 위협을 가하는 상태로 경제부문은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을 경제위기라 한다.

신용경색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신용순환과정(credit circle)에서 거시적 요인에 의해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때로는 정책당국의 정책대응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자금공급자의 행태변화 같은 미시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신용경색은 신용순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떤 시점에 경기가 활성화되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추가수요 또는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가 확대된다. 이러한 투자확대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촉발될 수도 있다. 이는 자본재에 의해 생산되

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켜 자본재를 비롯한 현존자산의 시장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초과수요를 초래한다.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은 내부유보, 기업간 신용, 은행대출과 채권발행, 주식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 부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며 이자지급을 위해 다시 부채를 늘리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담보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신용이 창출되게 된다. 누적적으로 신용이 창출된 가운데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한 정책당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자산가격이 하락추세로 반전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있거나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지속적인 자산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던 자금흐름이 불충분해지면서 경제주체들이 자산 대신 유동성(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산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자산가격의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된다. 은행은 기업의 부도를 우려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을 중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압박이 점차 확산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산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유동성 부족과 지급불능으로 도산된 일부 기업의 부실채권이 은행에 쌓이면서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고 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강화시키게 된다. 은행은 다시 담보력이 약한 기업의 대출을 줄이게 되고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신용경색현상이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우리나라 신용경색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2000년, 함정호, 정홍백)



3. 경제위기시 경제주체의 행동

경제 행위의 담당자들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들 경제 주체들 간에는 유기적인 경제 활동이 발생한다.

(1) 가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기업 및 정부로부터 획득한 임금, 이자 등의 소득으로 충당한다. 가계의 소비가 모여져 사회의 수요가 되고, 가계의 저축은 사회의 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소비자 선호의 변화는 생산에 영향을 주어 사회의 산업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가계가 경제위기시 불확실성을 예측하여 소비를 줄이게 된다. 줄어든 소비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약화시켜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기업: 가계로부터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받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

급하여 이윤을 획득한다. 기업은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경쟁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낮추려고 한다. 이러한 기업이 경제위기 시에는 거래상대방의 채권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금 거래를 늘리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즉, 채권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채권거래는 모험일 수 있다. 기업의 거래가 대부분 채권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위기시에 기업의 생산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 뻔하다.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은 당연히 생산인력(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이는 가계소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경제위기시에는 가계와 기업 모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계속적으로 상호간 부정적 영향을 주어 경기 악화의 악순환은 심해진다.

(3) 정부: 기업과 가계로부터 조세 및 국·공채 발행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것으로 기업의 생산물과 가계의 생산 요소를 구입한다. 정부는 경제위기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퇴출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실한 기업은 분류하여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4) 해외: 국가 간의 경제 활동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국가 간의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자금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경제위기시 해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경제위기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로 되고 있다.

4. 경제위기시 보증의 거래형태

(1) 보증료 변동: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주), 서울보증보험(주) 등과 같은 국내 보증기관의 보증료율체계를 종합하면 사업자보증 부분은 국내 보증기관 대부분이 신용등급을 주된 차등화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국내 보증기관의 보증료율 차등화 항목 현황이다.(원가정보를 활용한 적정보증료 모형의 개발 및 적용, 2007년, 안태식 외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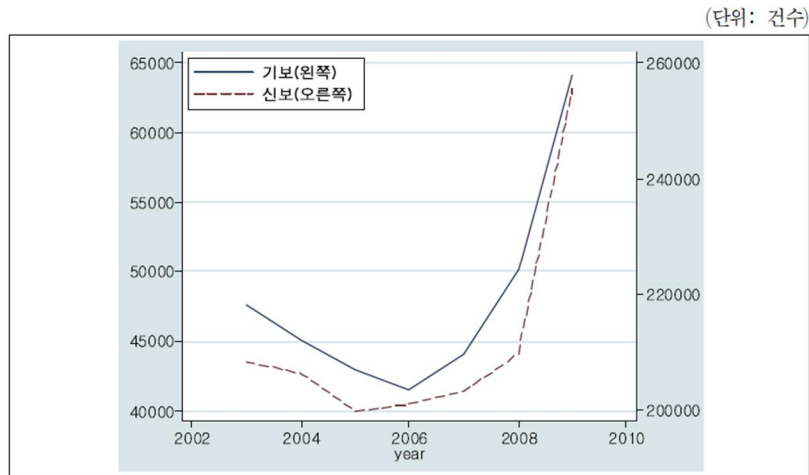
국내 보증기관의 보증료율 차등화 항목 현황

구분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주)	서울보증보험(주)
사업자	신용등급, 보증거래기간 및 신용도, 기업규모 등	신용(심사) 등급 등	신용등급, 보증내용
개인	-	고정보증료율	원리금상환방법, 주택유형

경제위기시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의 신용등급은 하향화 될 것이다. 이는 곧 보증료의 인

상으로 연결되게 된다.

(2) 보증거래량 변동: 아래 자료는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의 연도별 지원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2003년~2009년 사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35,406건의 보증이 제공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간 45,000여 건을 지원하고 있었고, 그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2009년에 50,135건과 64,095건으로 전년도 대비 13.6%, 27.7%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가 신용경색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이 심각해진 점을 고려하여 공적 신용 보증의 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공적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수는 건별 기준으로 2003년~2009년 사이에 1,483,821건에 이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간 200,000여 건을 지원하였고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25만 건으로 22% 증가하였다.(공적 신용보증이 한계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효과, 2015년, 이기영, 우석진)



자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2003-2009).

III. 결론

1.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에서는 경제위기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업으로 한정하여 설명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보증)을 통한 지원이 재무적 성과 개선 부분에서 효과성이 낮으며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낮다는 주장을 제기한 논문이 있다.(공적 신용보증이 한계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효과, 2015년, 이기영, 우석진)

해당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은 기업은 한계기업이다. 한계기업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이다.

- 최종 2개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 최종 2개년 연속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종 3개년 연속 이자보장배율 1 미만인 기업

$$* \text{이자보상배율} = \text{영업손익} / (\text{이자비용} + \text{매출채권처분손실})$$

한계기업이 보증을 제공받고도 수명이 비한계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짧다는 추정은 한계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는 한계기업에 한정된 것이며, 한국의 기업 전체를 볼 때 정부는 경제위기(신용경색)시 보증거래량을 늘려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제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위기(신용경색)시 보증계약이 활발하게 체결되지 않는다면 가계는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업의 어음거래량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고 개인의 대출거래 또한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신용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수요 및 공급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계속적인 악순환 될 것이다.

2. 결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8년과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당시 정부는 정책적으로 보증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는 경제위기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소득을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앞선 논문에서 주장하듯 무분별한 보증의 확대는 정부 정책의 실패 즉, 국민의 세금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신용경색)시 정부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하여 보증을 확대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증을 적용할 기업의 선택기준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증을 적용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실채권은 bad bank를 통해 시장에서 정리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무분별한 보증거래 확대만을 고려하기 보단 적절한 보증과 부실채권 정리를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한 축인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 되지 않도록 가계가처분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여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